■ '당·청 갈등 도화선' 김병준 부총리 거취 어떻게?

장기화땐 조기 정계개편 촉발 가능성

30일 교육현안 회의에 참석한 김병준 부총리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거취 문제가 추후 정국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거취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힘 겨루기가 장기화된다면 조기 정계개편을 촉발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부총리는 30일 오후 논문 표절 및 재탕의혹과 관련, 국회에 청문회를 요청하는 한편, 표절의혹을 제기한 일부 신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나왔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신중론 속에서도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퇴 불가피'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30일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김 부총리의 해명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갖자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의 이같은 언급은 김 부총리 측의 해명을 듣고 난 뒤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당내의 전반적 기류는 "이대로는 어렵지 않느냐"며 김 부총리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문학진 의원은 "이 정도로 문제가 됐으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문병호 의원도 "논문을 중복 게재하고 연구비 등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중 최종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김 부총리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건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김 의장은 지난 29일 김 부총리와 비공개로 만나 거취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 자리에서 당내의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거취 문제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靑, 임기말 권력 누수 우려 사퇴 반대
與 지도부, 청와대에 사퇴 건의 할 듯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곧바로 김병준 부총리의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김 부총리의 사퇴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경우 권력 누수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노 대통령이 고수하는 '코드인사'의 상징적 인물인 만큼 사퇴론에 떠밀려 경질할 경우 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장악력은 급속도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 부총리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국회 청문회 개최까지 요청하는 등 '버티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청와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여론이 이미 악화 된데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및 전교조 등에서 이미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마냥 사퇴 불가 입장만 고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의 힘 겨루기가 장기화 될 경우,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 및 이탈 등으로 조기에 정계개편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여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교총·전교조 "김부총리 용퇴해야"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의혹에도 불구 사퇴 불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단체들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윤종건)는 30일 성명을 내고 "김 부총리는 '논문파동'으로 학자로서뿐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장혜옥)는 "김 부총리는 교육계 수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기 때문에 용퇴해야 한다"며 "교육부총리는 엄격한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 맡고 있어야 될 공직이며 교육계 수장으로서 교육 공공성의 철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교육시민모임 · 공동회장 김정명신)은 김 부총리가 즉각 사퇴하고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갖추고 진정한 교육을 개혁할 사람을 다시 임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 상임대표 최미숙)은 김 부총리가 소신은 물론 도덕성까지 결여돼 있는 만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아온 추미애… 정치권 행보에 관심

2년간 美 유학 마치고 오늘 귀국
민주당 정계개편 동력 작용할 듯

추미애〈사진〉 전 민주당 의원이 2년간의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31일 귀국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에 휘말려 낙선한 뒤 미국으로 건너간 추 전 의원의 '컴백'은 탄핵 주역인 조순형 전 의원의 정계복귀 등과 함께 정국 상황 변화의 촉매제로 작용할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계개편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에 추 전 의원이 힘을 실어준다면 상당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추 전 의원이 귀국해 당에 오면 자연스럽게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고, 김효석 원내대표도 "분당 과정에서 나와 조순형 고문, 추 전 의원은 신당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열린우리당도 추 전 의원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전 의원이 민주당에 기울지 않고 소위 민주세력 연합 등을 주장하며 정치권 중간에 머무른다면 열린우리당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프로정신 갖춘 직원 선호
무소신·무책임 가장 싫어

경제부처 장관 설문조사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프로정신이 있는 직원들은 좋아하지만 소신과 책임감 없는 직원들은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토대로 문제의 근원을 파헤쳐 끈질기게 해결하려는 프로의식을 갖고 일하면 나중에 장관이 될 수 있다고 장관들은 직원들에게 조언했다.

이같은 내용은 연합뉴스가 경제부처 장관들을 중심으로 선호하는 직원 유형, 장관이 되고 싶은 직원에 대한 조언, 평소 건강 관리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권 부총리는 '장관이 되고 싶은 직원에게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장관이라는 자리를 목표로 삼으면 오히려 목표로부터 멀어질 것"이라면서 "세계사의 흐름과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를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시야를 넓히는데 힘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뿌리까지 파고들어 본질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프로정신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권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장관이라는 목표에 연연해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장관처럼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자리를 목표로 정하고 연연해 하기 보다는 항상 자기 맡은 직분에서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내가 장관이라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도 문제의식과 소신, 추진력을 갖춘 '프로'를 선호하면서 조화와 배려를 강조해 특유의 '보스' 기질을 드러냈다.

김성진 해양부장관은 윤 위원장 만큼이나 소신과 배짱을 내세웠다. 그는 "31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가부(可否)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온 점이 장관직에 이르게 된 이유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지만 말 많은 직원을 싫어했다. 그는 "소리없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을 가장 좋아하고 말만 앞서고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직원을 가장 싫어한다"고 전하고 "장관직에 이르게 된 결정적 이유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는 금언에 충실했던 덕분인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로고송 계약위반 선거운동 차질"

우리당 후보 97명 손배소

5·31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 97명은 "로고송 공급계약 위반으로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었다"며 로고송 제작·공급 업체 ㈜미디어쿨코리아 등을 상대로 30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들과 '오 필승 코리아', 'Go West' 등을 선거 로고송으로 제작해 열린우리당 소속 후보자들이 적법하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했으나 피고들은 원고들 중 일부에게 로고송을 전혀 공급하지 않거나 납품을 지연해 선거운동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8월 임시국회' 합의
여야, 민생법안 논의

여야는 내달 21일부터 약 일주일간 회기로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재산세 감면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밤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 공보부대표가 밝혔다.

우리당 노웅래,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 공보부대표는 "8월 임시국회를 21일부터 원칙적으로 열기로 합의했다"면서 "'원칙적'이란 표현을 넣은 것은 한나라당이 내달 2일 의총에서 임시국회 소집안을 추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를 일단 일주일 가량으로 잡아놓고 추후 원내 수석부대표간 논의를 통해 정확한 회기와 시급히 처리할 민생법안들을 확정하기로 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